

당정 “대차거래 상환 90일·대주담보 비율 105%로 일원화”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민당정협의회 개인 투자자에 유리한 요건 조성 기관 투자자 내부 통제기준 의무화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완전 차단

국민의힘과 정부는 16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 차별적 조건들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투자 주체와 관계없이 공매도 상환 기간은 90일로 하고, 공매도 투자자의 담보비율은 105%로 일원화된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민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유이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며 “현실적으로 공매도 거래 제약이 있는 개인 투자자에게 기관 투자자보다 조금 더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도상환 요구가 있는 대차거래도 상환기간을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대주 담보 비율을 대차거래와 동일하게 120%를 105% 이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며 “이와 함께 추후 논의과정에서 합리적 대안이 있다면 적



유이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극 검토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사전 방지를 위해 기관 투자자 내부 전산시스템과 내부 통제기준 의무화 방안을 논의하고, 내부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완전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를 중심으로 유관기관, 전문가, 투자자 등과 함께 구축 가능성과 대안 등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집중 조사 및 엄벌 방침도 정했다. 유 의장은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 국내 수탁 증권사에 대한 공매도 거래와 공매도 연계 불공정 거래 조사를 공매도 특별조사단으로 진행

하고 있으며 불법 적발 시 엄정 제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 적법성과 적정성을 점검하고 거래소 등 관련 기관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게 했으며 이상 징후 발견 시 신속 조사하기로 했다”며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주식거래 제한,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수단을 다양화하고 처벌수준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당정은 금융당국과 거래소 등 유관 기관이 함께 공매도 본질,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국내외 투자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적극 마련하도록 했다.

유 의장은 “공매도 관련 불법, 불공정

문제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 투자자와 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조속한 시일 내 최종안을 확정해 입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개미 투자자들은 실시간 전산시스템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는 질문에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실무 담당 거래소, 금감원 등이 관련 전산시스템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TF를 운영해가면서 투자자 얘기를 듣고 반영할 계획”이라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공매도 금지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냐’는 질문에 “가능하면 최대한 노력해서 6월말까지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하지만 제도 개선 사항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때 연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유 의장은 “상반기 안에 마무리하는 걸 최선의 결과로 생각하고 있다. 만약의 가정을 가지고 그렇게 예측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부위원장은 ‘시장조성자, 유동성 공급자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는 “개인 투자자가 가장 걱정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당연히 엄벌할 테고 체크를 할 계획”이라며 “관련해서 조금 더 검토한 이후 말씀드릴 기회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관련 IB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이미 내부적으로 3~4개사 정도 이상을 구체적으로 사건화해서 조사 중에 있다”며 “시장 조성자, 유동성 공급자와 관련된 것들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점검하되 실태가 어떤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빨리 가능하면 11월 중으로 지난 공매도 금지 이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보험료율 4%·6%인상” 등 2가지 안 제안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

1안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2안 15%·40%... 고갈시점 16년 연장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16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을 목표로 한 두 가지 안을 제시했지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구조 개혁’도 필요하다는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또 이날 여야 모두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대해 ‘추상적’ ‘맹탕’이라고 질타했고, 정부와 민간자문위 사이 이견도 노출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통해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며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연령 그룹에 따라 차등 추진한다고 했지만,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구체적인 숫자는 포함되지 않아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국회 연금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주호영 국회 연금특위위원장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포함한 모수 개혁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주 위원장은 “논의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을 가지고 찬반을 물어야 하는 것이지 백지로 던져주고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24개 조합 중에서 하라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보고된 민간자문위 보고서로는 소득보장을 위한 ‘보험



주호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료율 13%·소득대체율 50%’가 담긴 1안과 재정안정위해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로 하는 2안이 있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2.5%다. 이를 유지할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추정된다.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에 따르면 1안은 기금 고갈 시점이 7년 정도 연장되고, 2안은 기금 고갈 시점이 2071년으로 16년 정도 연장된다.

민간자문위의 보고서는 앞서 정부가 발표해 비판을 받은 ‘추상적’인 대안에 비해 쟁점을 좁혔다는 평가를 받지만, 모수 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개선)에 집중하느라 정작 핵심인 구조 개혁을 등한시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개혁 방향 우선순위를 놓고 정부와 민간자문위의 이견도 드러났다. 정부는 구조개혁에 해당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간자문위는 최종보고서에 “구조개혁의 큰 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수개혁을 우선 추진해 연금개혁의 지속적인 동력을 확보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고갈 시기만 6~7년 내지는 16년으로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5년 뒤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며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소득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하나 먼저 논의할 게 아니라 같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질타하기도 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실제 그제내 삶의 앞으로 어떤 체감을 갖다 줄 수 있다는 것인지는 굉장히 추상적”이라고 했고,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어떤 식으로 조합할 것이고 목표를 뭘로 할 것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으니 까 일각에서 ‘맹탕 계획’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예진 기자

민주당, 총선후보자 엄격·철저 검증

당 사활 걸려... 가상자산 등 검증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예비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강화 등 정밀심사를 예고했다.

특히, 이번 총선이 여느 선거보다도 당의 사활이 걸려있다고 판단해 가상자산 등 선출직 공직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엄격하게 들여다볼 방침이다.

김병기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장은 16일 첫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위원회 임무는 공정하고 단호한 검증을 통해 최정예 후보자들을 엄선해 공관위에 제공하는 것”이라며 “총선 승리를 위해 과거 그 어떤 선거보다도 엄격,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위원들께서 후보자 검증에 부담을 안느낀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 부담을 극복하고 검증에만 최선을

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검증에 따른 모든 책임 오로지 제가 지겠다. 훌륭한 위원들과 함께 총선 승리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 신청자 공모는 12월 초까지 1차 받을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도 검증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검증에 예외가 어디있나”라며 “앞으로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답했다.

주요 검증대상으로 언급된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거래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라며 “그런데 거기에도 불법적 내용이 있지 않나.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큼의 탈법, 불법이 있는지 보겠다는 것이지 가상자산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尹, 헌법재판관에 정형식 법원장 지명

대전고등법원장 등 거치며 원칙 충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사법연수원 17기)(사진)을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정 법원장을 지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비서실장은 “정 지명자는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5년 동안 서울고법·수원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

이나 있는 법관”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대전고등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 거치며 법원 행정에 있어서 원칙에 충실한 업무를 해왔다”고 평가했다.

/박정익 기자